

코리아연구원 논평 3호(2010년 3월 17일)

## 선거연합의 다음 걸음 지방연립정부를 준비하자

진보개혁진영이 진보신당이 불참한 가운데 다가올 지방선거를 선거연합을 통해 치르기로 합의했다. 코리아연구원은 이미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와 정책연합을 통한 지방연립정부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57호)

연립정부는 다수당과 소수당 간 지분과 정책의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4+4’의 잠정합의안은 민주당이 지분을 양보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정책의 공통분모에 합의하는 형식을 갖추 지방연립정부 수립의 초석을 깔아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물론, 지분을 둘러싼 협상의 결과가 각 정치세력에게 충분항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진보개혁진영이 타협과 연대의 장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벗어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방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 앞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정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해결해야할 어렵고 까다로운 구체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리아연구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진보개혁진영의 공동 선거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정치적 합의를 경쟁방식이든 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연합정치가 바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연합정치는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으며 공동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후보단일화는 시작점일 뿐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선거 승리라는 당면과제를 위해 공동의 선거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지방선거에 임하기를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이는 단일화된 후보들이 서로 다른 기호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다.

둘째, 지방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청사진을 빨리 마련해야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구성될 지방연립정부는 ‘4+4’가 합의한 공동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단체장은 한 정당 소속일 수밖에 없고, 현재의 권력분립형 정치체도는 단체장을 구속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4+4’는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선출된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정부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공동정부의 헤드쿼터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 및 시민사회는 각자의 지분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에 참여하여 공동정책을 숙의하고 위원회의 대표격인 단체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단체장이 이를 공동정부의 정책으로 실천하게 하자는 것이다. ‘4+4 테이블’이 후보단일화 논의를 넘어 누가 얼마나 지방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도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셋째, ‘5+4 테이블’에서 탈퇴한 진보신당 문제도 진보개혁진영의 큰 틀에서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협상 테이블을 깨고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는 아량을 보이기에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MB정부 2년의 무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연합논의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한 두 명의 대표주자가 아니라 기층부터 대중의 지지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진보신당의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는 전체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보신당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다 큰 승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할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 ‘희망과 대안’을 비롯한 3개 시민단체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아낄 수 없다. 이들의 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그 힘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나아가 지방연립정부 수립과 공동정책의 실천에서도 계속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0/03/17)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mailto: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http://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